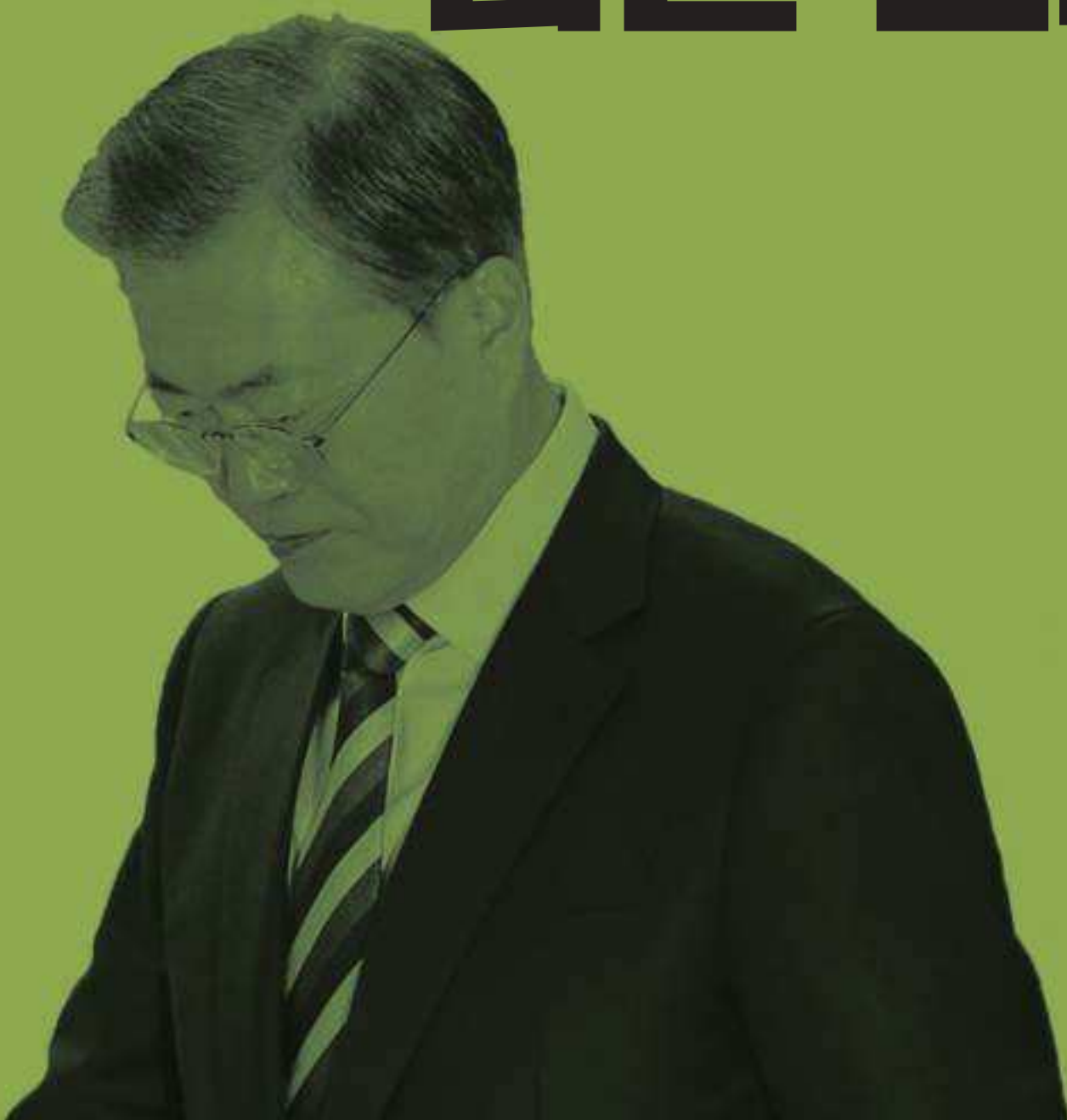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완화한 정부가말로 “숨은 전파자”다

관련 기사 12면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12면

팬데믹의 역사
자본주의는
어떻게
감염병 위협을
키웠는가

5~8면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2면

문재인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3면

1980년
광주민주항쟁 40주년
군부 독재에
맞서 일어난 위대한
무력 저항과
대중 민주주의

4면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노동운동
계급 협력 노선의
우울한 결말

10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

9면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김승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이자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를 비판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수요집회 성금 등 기부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다. 둘째, 윤미향 씨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미리 듣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셋째,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에 사육을 앞세워 국회로 갔다.

윤미향 씨와 더불어민주당, 정의기억연대는 해명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그간 회계를 엄격하게 관리했으며 피해자 지원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2015년 당시 외교부가 하루 전날 합의 내용 일부를 “일방 통보한 것은 맞지만 불가역적 해결 등 중요한 독소 조항이 빠져 있어 판단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우파의 쟁점 비틀기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 등 우파 언론들과 미래통합당(통합당)에 의해 쟁점이 윤미향 씨나 정의기억연대의 횡령, 회계 조작 의혹 등으로 번지거나 옮겨갔다. 우파들은 위안부 운동의 주요 인물들 간에 벌어진 갈등을 이용해 그 운동 자체를 흠집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악의적 비방도 쏟아냈다. <조선일보> 등은 김복동 장학금 수여 대상이 정의연, 민주노총, 전농 등 활동가의 자녀들이라는 것도 비리인 양 보도했다. 그러나 김복동 장학금의 취지가 여성·평화·인권 운동에 기여하는 활동가들과 그 자녀들을 격려한다는 것이고,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 논쟁의 본질적 쟁점이 아니다.

통합당은 “윤미향 씨가 시대의 아픔을 짓밟고 이용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진실을 규명하라”고 나섰다.

그러나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과거사 진실을 은폐하려 해 온 우파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대변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우파들이 노리는 것은 이 기회를 이용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에 흠집을 내는 것뿐이다. 특히, 우파들은 윤미향 씨의 부정 의혹을 부각시켜서 위안부 운동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려 한다.

그러나 그런 의혹들이 설령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이지 이 운동이 필연적으로 낳은 결과가 아니다. 무엇보다 위안부 운동이 추구해 온 대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5월 13일 이용수 할머니도 입장문을 발표해 “기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 편가르기”를 비판했다.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감과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 낸 성과에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꾸준히 이어져 온 수요집회

대한 폄훼와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고 우파와 선을 그었다.

그런데 통합당이 공세를 퍼자 윤미향 씨와 민주당은 “조국이 떠오른다”며 진영 논리를 불려내고 있다. 사태의 성격을 “친일·반인권 세력의 공격”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운동 외부에서 우파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운동 내부에서, 특히 위안부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위안부 피해 당사자 한 분의 항변에서 시작됐다. 그런 만큼 운동 내부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민주당-통합당 대결로 치환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3년

5월 12일 국제청은 정의기억연대가 공시한 회계 장부에 오류가 있으니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곧장 횡령이나 탈세 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듯하다. 정의기억연대의 재정은 위안부 운동을 지지해 온 사람들의 기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물론 정부 보조금도 받았다) 지지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그것이 이 운동에 낳는 효과이다.

3월 말 윤미향 씨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윤미향 씨 스스로도 “2주 전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급조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많은 비판이 가해지던 때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윤미향 씨가 위안부 운동의 대표성을 발판으로 여당의 위성 정당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하기로 했다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문제

인 정부를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문재인은 과거사 적폐를 청산하리라는 기대 속에 집권했다. 이용수 할머니도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창인 2017년 3·1절 집회에서 “박근혜 탄핵”과 함께 “새 정치, 새 대통령”을 외쳤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2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맺었던 이면합의를 폭로하면서 적폐 청산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행동했다. 문재인은 합의 과정과 결과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본이 항의하자 재빨리 그는 합의 “폐기”는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대선 공약이었던 “재협상”조차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2018년 말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10억 엔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세워진 기구)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10억 엔의 반환은 유보됐다. 10억 엔의 반환은 일본이 합의 파기로 받아들여 극구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상황은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

2019년 말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문화상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일 기업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정의연은 일본 국가의 출연금조차 없는, “박근혜의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안”이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씨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문화상 안’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30년 동안 거리에서 싸웠지만 이 문제를 한꺼번에 망칠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 공간은 결국 국회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윤미향 씨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문화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 메신저로 수차례 일본을 다녀온 인사다. 그런 자가 정권 핵심부와 아무런 교감 없이 그런 법안을 발의했을까? 그래서 문화상 안을 막기 위해 집권당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에는 모순이 느껴진다.

이미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한 인물들이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경험도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미경,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부 장관을 지낸 지은희가 대표적이다.

윤미향 씨는 이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국회로 가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등을 위안부 피해자들과 운동의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밝히고 함께 소통하지는 못한 듯하다.

위안부 문제는 제국주의와 역대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 문제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역사는 역사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분리해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은 분리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국가의 책임(전쟁 범죄)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미국이나 일본에게는 두 국가가 함께 추진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이 문제에 민감하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동맹 질서를 구축하는 데 과거사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개입해 왔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실천에서는 이런 제국주의적 질서에 도전할 뜻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한일전”을 외치더니 결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재연장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일 양국이 협조하는 제국주의 질서에 반대하는 운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윤미향 씨를 비롯한 NGO 중심의 위안부 운동 지도자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기보다 정부가 미해결 과제를 추진하도록 대화하고 설득하는 편을 택한 듯하다. 윤미향 씨의 국회 입성은 그 연장선일 것이다.

요컨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음에도 그에 맞서는 투쟁은 부족했고, 그런 상황에서 윤미향 씨가 여당 의원으로 국회에 가는 것이 갑자기 결정됐다는 점이 운동 내에서 갈등이 불거지게 한 진정한 요인이 된 듯하다. 이 갈등을 보면서 진보·좌파 진영이 돌아봐야 할 것은 이런 개혁주의 정치 문제이다.

우파들의 위선적인 의혹 제기 공세와 민주당의 진영논리 식 방어가 충돌하면서 진보·좌파가 살펴봐야 하는 진정으로 중요한 쟁점이 흐려지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결보기와 달리 위안부 문제가 제국주의 체제 문제(따라서 세계 자본주의의 권력 구조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김문성

문재인은 5월 10일(일) 이례적인 대 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집권 하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 방역 완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노동계에 요구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 주체들(노사정)이 타협하자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문재인이 “문제는 경제”라면서 강조한 경제 활성화 방안은 네 가지다. ① ICT(정보통신기술) 산업과 그에 기초한 신성장 동력 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②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실업 대책, ③한국판 뉴딜 계획, ④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그런데 한국판 뉴딜 자체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뒷받침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제 질서 선도는 최근 선진국 방역 실패 덕분에 오른 국가 위상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는 것에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문제인의 방향은 압도적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위한 직·간접적 기업 지원에 있다. 정부 예산의 기업 살리기 투자와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에는 고용이나 작업환경, 생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친기업 언론들 반응이 환영 메시지 일색인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게는 감염병 전문 병원·연구소 설립과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단



“문제는 경제” 초유의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기업의 수익성과 경제 성장을 더 우선하겠다는 선언

계별 확대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둘다 진보·좌파와 노동계가 오래도록 요구해 온 것이다. 지금 같은 코로나 19·경제의 이중 위기 국면에서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사실 이 안들은 정부 임기 초반인 2017년 8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됐었다. 이 문서는 문재인 대선 공약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18년~)(19년 과제)

“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

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설치”(45번 과제)

문재인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월에도 경제 활동 재개를 선불리 고무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조급증을 드러내 왔다. 그 직후 대구 지역 집단 감염으로 유행 사태를 겪고도 문제인의 강조점은 경제 위기에 대한 “전례없는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섯 차례 비상경제회의 때마다 수십조 원씩 기업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반면 방역과 실업 대책으로는 2017년에 약속하고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들을 재탕해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강조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 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원 대책들은 정부의 다른 정책들과의 모순이 더 커져 진지한 개혁 약속으로 들리지 않는다. 가령 공공의료 강화는 친기업 규제완화의 대표 목록인 의료 영리화의 물고기를 트려는 것과 모순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을 이용해 원격의료 등을 비대면 서비스로 포

장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한사코 방역 완화를 결정한 탓에 코로나19 재유행 조짐마저 보이는데도 방역 완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도 모순의 사례다.

이런 모순은 5월 11일부터 시작된 재난소득 지원 문제에서도 두드러진다. 경영 위기를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두산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두 기업에만 문재인 정부는 3조 3000억 원을 신속히 지원했다. 반면 소득 지원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는 것에 필요한 예산 3조 원을 추가하는 데는 한 달을 허비했다. 그러고도 소득 지원 신청 웹페이지를 사람들이 실수로 수령 거부(기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헛갈리게 디자인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별 확대하는 방안의 허점은 5월 12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한 고용보험 대상 확대 방안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문재인에게 고용보험 대상의 단계별 확대는 노동계 지도자들과 노동계의 양보를 놓고 거래할 대상일 것이다. 이는 문재인이 이 문제를 찢끔찢끔 개선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협상에 몸이 단 민주노총의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에게 다른 양보 목록을 제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고용보험 전면 확대를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협상 목록으로 올려놓고 교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상이한 부문의 노동자들끼리 단계별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기업 주 지원에는 전례없는 전광석화로 행동하지만, 노동자·서민 지원을 다룰 때는 강태공이 세울 낚듯 한다. ‘디지털 뉴딜’을 말하는 정부가 말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운운하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제외한 정부·여당

이창배 특수고용노동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11월 한정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년간 다루지도 않다가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절벽”을 해결한다며 취한 조치다.

5월 10일 문재인이 고용보험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서 후퇴한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애드벌륜을 띄워 놓고는, 실천에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고용보험이 절실한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을 보여 준

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하고 문화예술인 노동자만을 자영업자로 규정해 특례 적용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문화예술인 노동자들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수고용직인 문화예술인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용보험과 노동기본권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부문의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해 놓고 집권 3년차가 지나도록 온갖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도 국회 합의를 핑계 삼아 회피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1년이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업체들로부터 배차 제한, 부당한 비용전가 등 온갖 갑질에 시달려야 했다.

코로나19는 고용보험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일감이 줄어 최저임금에 불과했던 수입조차 반토막 나고 강제로 휴직을 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라는 식의 정부 대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조차 특수고용직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 대책은 산불에 바가지로 물 뿌리며 생색내는 식이다.

이마저도 소외된 노동자들은 바닥을 모르는 생계의 절벽에 내던져지고 있다. 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을 외면해 온 탓에 지금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기업



약속 이행은 언제? 생계 절벽을 마주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뒤로 미루다

주들의 눈치를 보며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 약속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예외 없이 전면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1980년 광주민주항쟁 40주년

군부 독재에 맞서 일어난 위대한 무력 저항과 대중 민주주의

김동철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공저자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인 사람 모두가 흥분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바로 어제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저항을 목격했었다.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금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제까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력을 보여 주었다. … 그들의 몸짓과 말은 자신들이 성취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 지금 내 앞에 전개되고 있는 모습은 ‘폭도 학생들과 깡패’ 그리고 ‘불순분자’들의 소행이라는 군인들의 발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을 목격한 미국인 자원봉사자 폴 코트라이트는 최근 출판된 회고록《5.18 푸른 눈의 증인》에서 잔인하게 진압하던 군인들을 몰아낸 사람들의 분위기를 위와 같이 묘사했다. 이것은 광주민주항쟁을 여전히 폭동이라고 생각하고 학살은 정당한 진압 행위였다고 강변하는 전두환과 우파들의 주장에 대한 생생한 반박이다.

물론 위에서 묘사한 기쁨과 열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짓밟혔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계승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광주민주항쟁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할 것이다.

항쟁의 배경

광주민주항쟁은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모순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1960년대 이래로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는 방식의 자본축적은 세계경제의 등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한국 자본주의가 주기적인 위기에 노출되게 만들었다. 특히 1979~80년은 위기가 심각했는데, 1980년에는 산업화 이후 최초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앞서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초반의 위기에 대응해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권위주의적 억압을 강화했었다. 그런데 1979년 당시 경제 위기가 한국 자본주의가 낳은 두 번째 모순(대규모 노동계급의 창출과 저항)과 맞물려 바로 기성 정치 체제(유신)의 심장부를 뒤흔들어 놓았다.

1970년대 국가와 회사에서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키려는 투쟁은 집요한 국가 탄압 때문에 금방 정치·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기도 했다. 1979년 YH무역 투쟁도 한 사업장에서 시작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독재에 저항하는 정치적 초점이 됐다. 야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노동자들을 박정희 정권이 강제 진압한 것이 공분을 샀다.

YH 투쟁은 같은 해 부마항쟁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부마항쟁의 시발점



1980년 광주 항쟁 당시, 금남로에 버스 등을 몰고 와 공수부대의 만행에 항의하는 시위대

인 부산대 학생들의 선언문에도 YH 탄압에 대한 항의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었다. 그동안 쌓인 계급적·정치적 불만을 격렬하게 표출한 부마항쟁은 군대를 동원한 박정희의 탄압으로 가라앉았지만 부마항쟁의 영향으로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이 가속화됐다.

강경 조치로 계속 나아간다면 체제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경고했지만, 박정희는 억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다. 결국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여 위기에 처한 체제를 구하러 했다. 하지만 박정희가 죽은 뒤의 상황을 결정지은 것은 김재규의 손 끝이 아니었다. 김재규를 밀어붙인 아래로부터의 힘과 박정희의 뒤를 이어 억압적 착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전두환이 대립하게 됐다.

1979년 12월 12일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당시 계엄사령관)를 제압하면서(12·12쿠데타) 지배집단 내에서 주도권을 쥔 전두환은 본격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파괴하기 위해 움직였다.

한편 박정희 죽음 이후 그동안 숨죽이던 학생운동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학생회를 조직하고 학내민주화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동자들도 억눌린 불만을 터뜨리고 노동쟁의가 급증했다. 1980년 초부터 4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노사분규는 809건이었는데 이것은 1979년에 105건이었던 것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투쟁은 전두환을 제압할 만큼 확대되거나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600여 명이 넘는

재야·학생운동 지도자·언론인 등을 체포하면서 전면적인 탄압에 나섰다.

다른 지역에서 투쟁이 멈춘 것과 달리 광주에서는 시위가 계속됐다. 군부독재가 호남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면서 분열지배 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천대에 시달린 호남 사람들은 군부독재에 대항하며 그동안 쌓인 분노를 표출했다.

전두환은 광주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까 봐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그는 광주를 초기에 잔인하게 짓밟아 본보기를 보여 주려 작심했다. 공수부대의 짐승 같은 야만 행위는 그 결과다.

항쟁의 전개

5월 18일 오전 10시 전남대 정문에 학생 100여 명이 모여 농성을 벌이자, 학교를 지키던 공수부대가 학생들을 공격했다. 공수부대의 공격에 밀린 학생들은 시내로 나가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하면서 시내에서 시위가 시작됐다.

곧 광주 시내에서 공수부대가 사람들을 잔인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잡아서 무조건 군화발과 곤봉으로 피범벅이 되도록 때렸고, 체포한 사람들을 거리로 끌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기고 기합을 주고 괴롭혔다.

공수부대 폭력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했다. 꼬마 손을 잡고 나온 할머니, 점원, 학생, 회사원, 가정주부, 요식업소 종업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투쟁은 민중항쟁으로 발전했다.

5월 21일 도청 중심으로 30만 명이 모여 투쟁의 정점을 이루었다. 이제 곧 공수부대가 물러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정오가 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공수부대 발표

가 시작됐고 조준 사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러자 사람들은 계엄군의 총격에 대응해 무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형성된 시민군의 저항으로 5월 21일 저녁 드디어 계엄군이 광주에서 철수했다.

계엄군이 물러난 광주는 소수 지배자나 전문 관료가 아니라 대중이 이 사회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게 됐다. 폴 코트라이트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

“[완전히 무료였던] 주유소에는 버스 트럭을 비롯해서 각종 군용 차량들이 어지럽게 모여 있었다. 한시라도 더 빨리 연료를 채워 도로로 나서고 싶은 차량들로 가득했다. … 이 차에서 저 차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무기들이 전달되고 있었다. … 시민들의 바리케이드는 비록 잡동사니로 만들어 엉성하기는 했으나 시민들은 질서가 잡혀 있었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역력한 긴장감이 돌았으나 다들 친절했다. … 시민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도청 건물 정문 쪽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테이블 앞에 줄을 지어 있었는데 테이블마다 대학이나 기관 등의 이름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청년들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묻고 받아 적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접수를 받고 있는 창구였다. 등록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에게 청소 등을 비롯해 각자 자기들이 맡아서 해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시민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쟁은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었고 전두환은 진압 기회를 노렸다. 결국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광주 시내로 진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청을 점령했다.

항쟁의 계승

광주민주항쟁은 물리적으로 패배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1980년대 많은 사람들이 광주민주항쟁의 영향으로 급진화됐고 군부독재에 맞서 기꺼이 싸우고자 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군부독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사회 변화(즉, 혁명)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 변화에서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인식한 투사들도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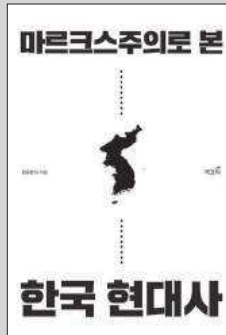
결국 1980년 광주민주항쟁은 19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져 전두환 군부독재를 무릎 꿇렸다.

광주민주항쟁은 한국 노동계급 운동 역사의 중요한 일부로 볼 수 있다. 전두환이 박정희가 구축한 억압적인 착취 체제를 지키고자 광주 민중을 짓밟았듯이 박정희의 억압적인 착취 체제 속에서 형성된 거대한 노동계급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과정 속에 광주민주항쟁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힘이 결정적 구실을 해 군부독재가 없는 오늘(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을 사는 우리는 자본주의가 가하는 끔찍한 고통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 위기와 전염병 때문에 삶에 위협을 받고, 반복되는 대형 사고들로 목숨을 잃을 걱정을 해야 한다. 이는 이윤을 위해 대중의 삶과 안전을 무시하는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게다가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도 불안정해진다. 급기야 일부 지배자들이 이를 엿어 버리는 일도 역사에서 반복돼 왔다.

이러한 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광주민주항쟁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일 것이다. 광주민주항쟁에서 보여 준 대중 민주주의는 몇 년에 한 번 투표하고 선출된 대표를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틀에 옥여넣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추천 책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한규한, 김동철, 김현옥 지음.
책갈피, 280쪽, 13,000원

팬데믹의 역사

자본주의는 어떻게
감염병 위협을
키웠는가

조셉 추나라

다음은 영국의 계간 사회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2020년 봄호(166호)에 실린 조셉 추나라의 글 “팬데믹 시대의 사회주의”의 일부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 조셉 추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다.

초기 인류 사회는 수렵·채집 생활을 하는 작은 무리로 이뤄져 있었다. 이런 작은 무리들은 때때로 다른 동물이나 환경에서 유래하는 감염병에 노출됐다. 작은 무리를 이룬 인간들은 감염병에 걸려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역력을 획득하게 됐다. 어찌 됐든 최초 감염 집단 너머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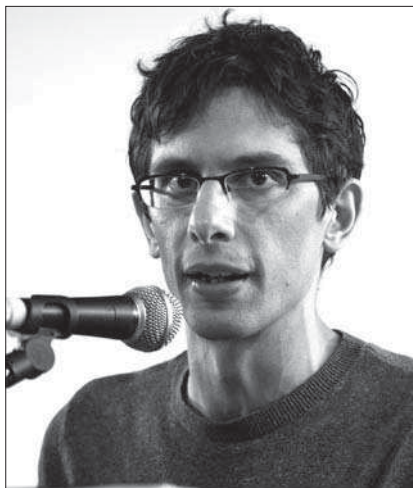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 약 1만 년 전 중동에서 시작된 신석기 혁명의 결과로 정주 농경 사회가 등장했다. 인구가 늘어나고 정착지에 인분이 쌓였다. 가족을 길러서 지속적으로 동물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나 다른 병원체가 퍼지기 훨씬 좋은 조건이 형성됐다. 인구 집단 사이에서 무역, 전쟁, 이주가 늘어난 것도 병원체가 퍼지는 데에 도움이 됐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일군의 질병들에 공통적으로 노출되면서 [사람들과 병원체들 사이에 “불안정한 순응”이 나타났다. 그 결과 역사가 윌리엄 맥닐이 말한 “문명화한 질병 집적지”들이 지중해나 인도 아대륙 등지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형성됐다.

그러나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거나 전쟁이나 정복이 벌어지면 이런 곳에도 새로운 질병이 유입됐다. 예컨대 서기 165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활동하던 군인들을 매개로 로마 제국으로 “페스트”(어쩌면 천연두일지도 모른다)가 퍼졌다. 페스트는 15년 동안 유행했고 이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벼룩한테서 옮는 세균성 감염병인 가래톳페스트는 상선을 타고 퍼진 곰쥐를 매개로 확산되다 541년 지중해에 상륙했다. 이 질병은 767년 무렵까지 간헐적으로 유행했는데,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추정도 있다.

13세기 몽고 제국이 무역로를 열고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 광대한 연락망을 구축한 결과, 가래톳페스트는 유라시아 대조원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설치류에게 전파됐다고 맥닐은 주장한다. 그 후 이 질병은 대상(倭商)의 이동 경로를 따라 퍼지다 1346년 크림반도에 이르렀고, 그 후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무역 네트워크와 항로는 북부 유럽으로까지 뻗어 있었고 이를 타고 곰쥐와 질병이 유럽 전체로 확산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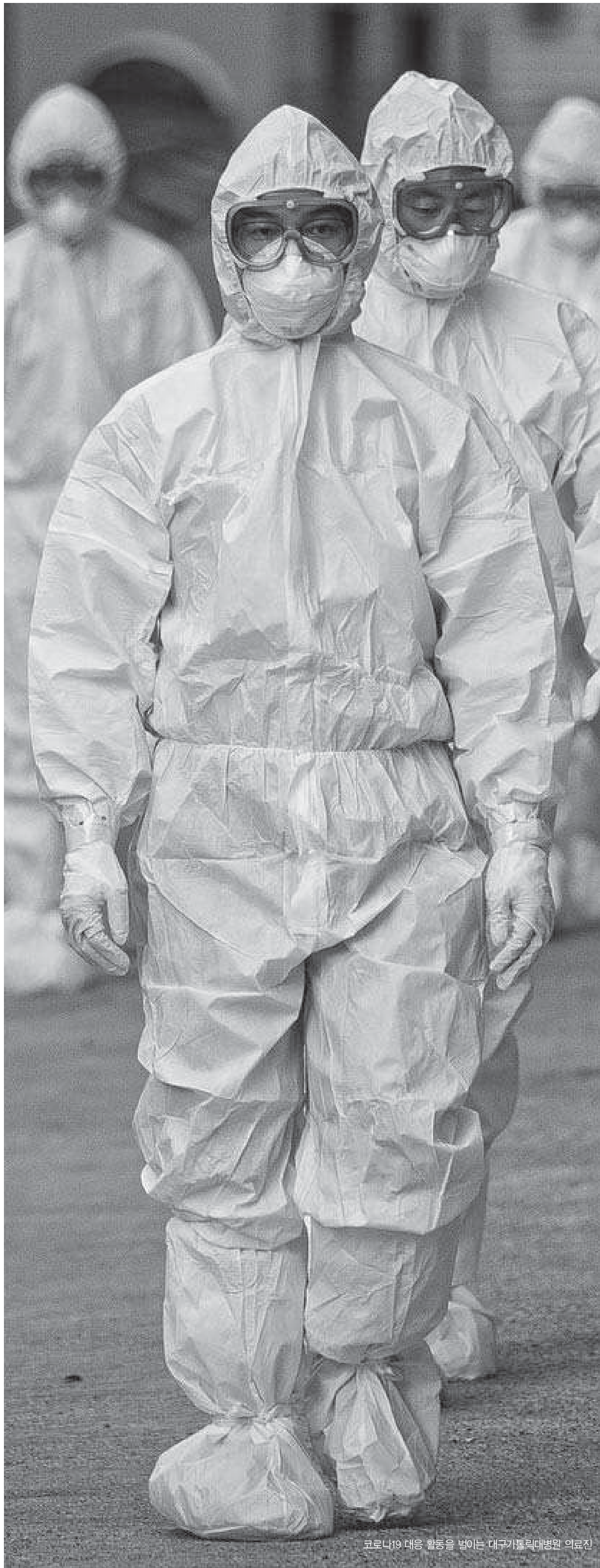
다. 그 결과 1346~1350년 동안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다. 인구 밀도가 늘어나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치고 쥐가 들끓은 탓에 흑사병은 빠르게 퍼졌다. 가래톳페스트의 주기적인 유행은 유럽에서 1670년대까지 계속됐다.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 파괴적이었던 사례는 “신세계”로 불린 아메리카 대륙이 식민화되는 과정에서 퍼진 “구세계”의 질병들이다. “신세계”는 “구세계”의 질병에 특별히 취약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인구 밀집 지역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전염병의 역사가 긴 아프리카·유라시아 대륙만큼의 생태적 다양성은 없었다. 게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식량 생산에서 가족이 하는 구실이 더 적었다. 천연두, 볼거리, 홍역이 식민 제국을 건설하는 잔혹한 과정과 결합했다. 이것이 초래한 감염병 유행은 1568년부터 반 세기 동안 멕시코 중부에서 인구의 90퍼센트를 쓸어버렸다.

아메리카 대륙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재앙이 일어났다. 페루 원주민 인구는 7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었다. 이 재앙은 다시 “구세계”로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행한 결과로 나타났을 공산이 큰 더 치명적인 천연두 균주가 17세기에 유럽으로 도로 유입된 것이다. 18세기 초에 그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40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유럽에서는 심대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다. 위생 상태가 엉망인 빈민가로 인구가 대거 몰리면서, 새로 생겨난 도시에 열악하고 지저분한 생활 환경이 조성됐다. 가난, 스트레스, 인구 과밀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커졌고 일단 질병이 한 번 나타나면 순식간에 퍼질 지경이 됐다. 게다가 도시에 상륙한 질병은 성장하는 무역 네트워크를 타고, 노동·전쟁·식민지 통치를 위해 또는 전쟁·가난·탄압을 피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매개로 확산될 수도 있었다.

영양 상태, 하수도, 위생, 공중 보건이 개선되기 시작한 19세기가 되기까지 영국에서는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보다 대체로 더 이른 나이에 죽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벌이는 대구기톨릭대병원 의료진

런던은 사람들을 먹여치우는 “결산”이었다. 런던에서는 “천연두, 홍역, 결핵 같은 ‘대중성 질병’ 탓에” 18세기 거의 내내 태어나서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죽어서 매장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바이러스처럼 동물을 통해 전염되지 않았다. 인간 자신이 천연두의 숙주였다. 천연두가 어떤 지역을 한 차례 휩쓸 뒤에도 그 지역에 계속 남아 있으면, 매년 천연두에 감염된 사람이 충분히 태어나야 하므로 인구가 10만 명은 돼야 했다. 17세기 중반 런던에는 이미 그것의 세 배나 되는 인구가 있었다. 1801년에는 맨체스터, 리버풀, 버밍엄 인구가 각각 10만 명에 육박했다.

대체로 폐에서 증상을 일으키는 결핵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성 전염병이었지만 여기서도 동물 유래 감염이 중요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우유를 매개로 인간에 감염됐고, 그런 다음에는 기침이나 타액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됐다. 수천 년 전에도 결핵이 발병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 시기는 아마도 소를 가축화한 시기와 맞물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핵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 도시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1780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사망자의 5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점부터 결핵의 확산은 초기 산업화의 패턴을 따라갔다. 결핵은 처음에는 서유럽, 그 다음에는 동유럽과 아메리카로 퍼졌다. 당시 미국에서는 결핵을 “소모”라고 불렀는데결핵 환자의 체중이 급감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1812~1821년 뉴욕에서는 사망자 4분의 1이 “소모”로 죽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형성뿐 아니라 “도시 낙농업”의 존재도 결핵의 확산에 영향을 줬다. 도시 낙농업은 결핵이 소에서 소로, 그리고 소에서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게 했다.

19세기에는 도시화, 빈곤, 식민주의가 결합돼 새로운 위협을 낳았다. 콜레라는 수 세기 동안 인도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인도가 영국 제국에 편입되고 그

감염병, 만성 질환, 영양 실조가 공중 보건 축소, 위생 결핍과 결합돼 일으킨 치명적인 폭풍은 현대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에 따라 인구와 재화가 이동하면서 콜레라가 확산했다. 1817년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 유행이 중국과 러시아를 뒤덮었다. 3년 후 영국 군인들은 콜레라를 지중해 동부로 퍼뜨렸다. 그리고 1832, 1848, 1866년에는 인도에서 유럽, 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되는 진정한 팬데믹이 벌어졌다.

환경 역사가인 조지 메너는 다음과 같이 썼다. “도시, 대개는 무역과 관련 된 항구 도시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 병의 특징이었다. 발병은 처음에는 그 지역을 연결하는 수로와 연관지를 수 있었고, 몇 년이 지나면 여러 주를 중심으로 질러가는 성장하는 철도망과 연관지를 수 있었다.”

콜레라

콜레라는 감염자의 절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콜레라는 가난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했다. 콜레라균이 오염된 물로 퍼졌기 때문이다. 19세기 초에는 오물이 들뜬에 뿌려지거나(농촌의 경우) 주택에서 떨어진 곳이나 길거리에 버려지기 일쑤였고, 식수원인 호수나 강에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짧은 시절 19세기 맨체스터에서 콜레라를 퍼뜨리는 생활 환경에 관해 자세히 쓴 바 있다. “유행이 시작되면 도시의 부르주아지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불결한 거주지를 떠올리고는 그런 빈민굴 하나하나가 역병의 중심지가 돼 유산 계급의 저택으로 사



자본주의가 극복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위험한 감염병이 사람들을 위협할 것이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옮기고 있는 경북대병원 의료진

방팔방 불행을 퍼뜨리리라는 확산이 별 별 땀었다.” 엥겔스는 맨체스터에 있는 집중적으로 발병했다. 콜레라균이 오염된 물로 퍼졌기 때문이다. 19세기 초에는 오물이 들뜬에 뿌려지거나(농촌의 경우) 주택에서 떨어진 곳이나 길거리에 버려지기 일쑤였고, 식수원인 호수나 강에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짧은 시절 19세기 맨체스터에서 콜레라를 퍼뜨리는 생활 환경에 관해 자세히 쓴 바 있다. “유행이 시작되면 도시의 부르주아지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불결한 거주지를 떠올리고는 그런 빈민굴 하나하나가 역병의 중심지가 돼 유산 계급의 저택으로 사

아 독감”이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부하라에서 시작된 러시아 독감은 그해 가을 페테르부르크로 번졌고 8주 만에 유럽 전역과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부로 확산했다. 러시아가 불가능해졌으며, 939채는 제대로 된 배수 시설이 없었고, 1435채는 습기가 찼으며, 452채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2221채는 변소가 없었다.”

몇 년 후 엥겔스는 “주택 문제”를 다룬 글에서 같은 문제를 다뤘다. “현대 자연 과학은 노동자들이 밀집한 소위 ‘해로운 구역’이 우리의 도시들을 괴롭히는 모든 전염병의 온상임을 입증했다. 콜레라, 티푸스, 장티푸스, 천연두 등 온갖 무시무시한 질병들 … 자본주의 사회 질서는 치료해야 할 이 병폐를 거들해서 재생산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상황은 결코 과거 지사가 아니다. 예컨대 전쟁과 기근으로 황폐화된 예멘에서는 최근에도 콜레라가 유행했다. 더 일반적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슬럼의 형성은 팬데믹을 낳는 산업화 초기의 생활 환경을 더 널리 확산시켰다. 감염병, 만성 질환, 영양 실조가 공중 보건 축소, 위생 결핍과 결합돼 일으킨 치명적인 폭풍은 현대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대중성 질병을 낳던 여건들이 일부 개선됐지만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모습을 드러냈다.

인플루엔자 유행도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었다. 1550년대에 유행한 인플루엔자는 잉글랜드 거주자들 5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다음 아메리카 대륙에 또다시 큰 피해를 입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 돌아온 인플루엔자는 더 위협적이었다.

그 서곡은 1889년에 시작된 “러시

날은 사망자보다 몇 배나 많은 수다.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단지 인플루엔자 균주의 독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로 인해 2차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들어와 폐렴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에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치명률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는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었다. 인도에서는 스페인 독감이 1850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인도인들은 기아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시달렸고, 영국의 곡물 징발은 가뭄과 맞물려 면역 반응을 약화시켰다. 공중 보건도 불충분했다. 이 모든 요인들이 재앙을 부채질했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인플루엔자의 정체를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대확산을 초래했는지 알아내고자 수십 년 동안 노력한 이후 1947년 국제 인플루엔자 감시기구가 설립됐다. 이 기구는 나중에 신생 세계보건기구(WHO)의 일부가 된다.

이후에 1957년(“아시아 독감” 팬데믹), 1968년(“홍콩 독감” 팬데믹)에 유행한 인플루엔자는 각각 약 200만 명과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그 후 빗나간 정보가 두 건 있었다. 하나는 1976년에 발병한 돼지 독감으로, 이 질병은 미군 기지를 통해 확산되다가 사라졌었다. 그러기 전에 미국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300만 명이 정부 주도의 비상 계획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았다. 두번째 사례는 1977년 “가짜 팬데믹”이었는데 이 질병은 광범하게 퍼졌지만 증상이 미약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현대 축산 복합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오라인 잡지(《新》)에서 한 이름의 저자는 윌리스의 논의를 끌어다 쓰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현대 세계를 위협하는 팬데믹

바이러스성 팬데믹의 등장은 여전히 현대 세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 위협을 이해하려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살펴 봐야 한다.

여기에 생물학자인 롭 윌리스 등의 저자가 도움이 된다. 롭 윌리스는 현대 농업 체제와 동물 유래 감염의 연관성을 추적했다. 가장 잘 알려진 윌리스의 저서 《거대 농장이 거대 독감을 낳는 다》[국내 미번역]는 대규모 농축산업이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거대한 배양 접시 구실을 할 가능성을 조명한다. 많은 수의 단일 품종 가축을 한 곳에 몰아넣고 기르는 축산 방식은 전염률을 높이고 면역 반응을 약화시킨다. 산업적 농업의 성장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늘어나는 육류 소비에 맞춰 육류를 공급하는 “축산 혁명”은 소위 “남반구”에 집중됐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산업화된 양계 · 축산의 세계적 상징이자 … 매년 22억 마리의 닭을 도살하는 타이슨 푸즈는 대규모 수직 계열화, 계약 사육자 착취, 거러걸 없는 노동조합 탄압, 횡행하는 산업 재해, 폐기물 방류, 정치적 부패의 국제적 대명사가 됐다. 타이슨 같은 거대 기업들의 국제적 지배력 때문에 지역 농민들은 대규모 닭고기 · 돼지고기 가공 기업들에 통합돼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 농업 지대 전체가 양계장으로 전환됐고 농민들은 양계장 관리인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은 현대 축산 복합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오라인 잡지(《新》)에서 한 이름의 저자는 윌리스의 논의를 끌어다 쓰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바이러스성 팬데믹의 등장은 여전히 현대 세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 위협을 이해하려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살펴 봐야 한다

경제 주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약적인 과정이 벌어진다. 경제 주변부에서 “야생” 균주를 접하는 사람들은 지역 생태계에 유래 없이 광범위한 농업 · 경제적 침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다. … 전염병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농업 · 경제적 생산의 핵심부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핵심부의 배후지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

자본의 기본적인 논리는 이전까지만 해도 고립되고 무해했던 바이러스 균주를 극도로 경쟁적인 환경에 떼려다 놓는 데에 일조한다. 그런 환경에서는 감염병 유행에 도움이 되는 특정한 형질들, 예컨대 빠른 수명 주기, 동물과 사람 간 감염 도약, … 새로운 매개로 전파되도록 빠르게 진화하는 능력 등이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문제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는 공장식 축산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생태계 파괴와 상품 생산 확대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상이한 동물 종들을 한데 모이게 하고 인간들을 다른 동물들과 만나게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병원체를 유행시킨다.

몇 가지 사례가 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1960년대에 볼리비아 출



공장식 축산과 자연 파리는 바이러스가 병독성과 전염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했다

혈열이 설치류를 통해 농장 노동자들에 퍼졌다. 1963~1964년에 그 병은 샌와킨의 농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발병했다. 그 지역 쇠고기 산업을 장악하고 있던 유력 가문이 1952년 혁명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업을 접자, [그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샌와킨 사람들은 몰당한 밀림으로 밀려나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 살던 설치류의 서식지를 파괴했다. 그 설치류들은 마을로 침입했다. 밀라리아를 잡기 위해 DDT를 살포하는 바람에 고양이 개체 수가 준 것도 사멸을 악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도로 건설로 인해 설치류가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열병은 전국으로 퍼졌다.

다른 사례는 1990년대 말 동남아시아에서 등장한 니파바이러스다. 이는 집약적 온사가 발전하고 박쥐를 매개로(아마도 배설물에 의해) 돼지가 감염된 결과였다. 당시 박쥐들은 가뭄과 별개로 서식지가 파괴됐다. 특히 중요한 최근의 사례는 에볼라바이러스다. 감염자의 최대 90퍼센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에볼라바이러스가 유행성 형태로 나타난 것은 2013년 서아프리카에서다. 에볼라 바이러스 또한 야생에서 박쥐에 의해 전염되던 바이러스였다. 기니 지역의 사바나에서 미국, 유럽,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토지를 약탈한 결과 박쥐들은 먹이와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기름야자 대농장으로 모여들었고 이는 동물 유래 감염이 나타날 조건을 조성했다.

이런 경향은 농업이 아무런 규제 없이 확장되면서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악화했다. 그래서 윌리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업적 농축산업과 더불어 — 춘나라 자본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원시림과 소농 경작지까지 남김없이 정복하려 합니다. 이들의 투자는 삼림 파괴와 개간을 추동하면서 새로운 질병이 생겨날 조건을 만들어 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하는 대규모 토지를 일괄적으로 개간하면서 이전까지는 한 곳에 갇혀 있던 병원체가 그 지역의 가축과 주민들에게 전염됩니다. 요컨대 런던, 뉴욕, 홍콩 같은 국제 자본의 중심지인 거대 도시를 질병의 주요 온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적 농축산업과 더불어 — 춘나라 자본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원시림과 소농 경작지까지 남김없이 정복하려 합니다. 이들의 투자는 삼림 파괴와 개간을 추동하면서 새로운 질병이 생겨날 조건을 만들어 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하는 대규모 토지를 일괄적으로 개간하면서 이전까지는 한 곳에 갇혀 있던 병원체가 그 지역의 가축과 주민들에게 전염됩니다. 요컨대 런던, 뉴욕, 홍콩 같은 국제 자본의 중심지인 거대 도시를 질병의 주요 온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이용의 변화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더 광범위한 생태계 교란도 동물 유래 감염의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

이런 양면적인 위협의 증대는 최근 수십 년 간 나타난 두 가지 주요 인플루엔자 발병에서 잘 드러난다.

인플루엔자

첫째는 “조류 인플루엔자”(H5N1)에 알려진 특이한 균주에서 생긴 것이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1997년 홍콩의 양계장에서 처음 나타났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많은 닭이 폐사했다. 그 해 말 18명이 입원했고 H5N1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1997년 12월에는 홍콩의 재래식 “신선 식품 시장”에서 산 채로 팔리던 닭들이 폐사했다. 이번에도 범인은 H5N1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에는 “매우 다양한 농가들이 있

어서 … 닭들을 (닭 입장에서) 매우 스펀트레스가 큰 환경에 대거 몰아넣고 기르는 대규모 시설도 있고, 닭들이 다른 가축들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수로나 연못에서 야생 오리나 야생 거위 같은 야생 조류와 어울려 지내는 소규모 시설도 있다.” 시장 변동을 완충하기 위해 임시로 닭들을 수용하는 “수용 시설”도 존재한다.

이 무제획적이고 규제되지 않는 산업 추라기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균주가 결합돼서 생겨난 것임이 밝혀졌다.

H5N1의 확산은 공세적으로 세대를 도살 처분하고, 시장을 폐쇄하여 소독하고, 종을 분리하도록 시장을 개편하고, 생으로 판매를 금지해서 저지됐다. 2억 마리에 달하는 가금류가 폐사하거나 도축됐다. 이런 조치들은 효과가 있었지만, H5N1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적었고 그 규모가 작았던 덕이 크다. WHO의 기록에 따르면 H5N1에 감염된 사람은 861명이었고 그중 455명이 사망했다.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곳은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최초의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일으킨 것은 H5N1이 아니었다. 2009년에 H1N1(“돼지독감”) 균주에 기반을 둔 인플루엔자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다. 이것은 1918년 팬데믹을 일으킨 균주의 변종이었다. 그 발원지는 동남아시아의 재래식 신선 식품 시장이 아니라 북아메리카였다. 이 균주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이 바이러스는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것이 가능했다. 이 질병은 대규모 산업적 농축산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던 멕시코의 돼지 폐로 퍼졌다. 이 균주는 “인간과 조류, 북미와 유라시아에 사는 두 가지 돼지”에 감염되던 바이러스 계통의 유전자 조각이 결합된 것으로 밝혀졌다. WHO는 재빨리 돼지 인플루엔

을 병원체가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병원체는 독성이 강해지는 것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숙주가 죽기 전에 다음 숙주에 성공적으로 감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산업적 — 조생 춘나라 농축산은 인플루엔자가 독성을 키우는 쪽으로 진화하도록 또 다른 방향에서 압력을 가한다. 산업적 농축산에서는 감염된 개체들이 일정한 수에 이르면 살처분된다. 숙주에 머물고 있는 인플루엔자 감염은 닭이든 오리든 돼지든 어떤 동물이든 그 동물이 살처분되기 전에 충분히 많은 숙주를 만들어야 한다.

파라서 광동성과 홍콩에 걸쳐 양쪽 모두를 넘나드는 가금류 농축산 네트워크는 치명적인 인플루엔자가 생겨나기에 매우 알맞은 환경이다. 이 지역에서 는 확장되고 산업화했지만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농축산업이, 그 지역의 습지 로까지 뻗어 나간 농축산 현장이나 재래식 신선 식품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조류의 혼재와 결합했다. 나중에 H5N1은 거위에서 발견되는 균주와 매추라기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균주가 결합돼서 생겨난 것임이 밝혀졌다.

H5N1의 확산은 공세적으로 세대를 도살 처분하고, 시장을 폐쇄하여 소독하고, 종을 분리하도록 시장을 개편하고, 생으로 판매를 금지해서 저지됐다. 2억 마리에 달하는 가금류가 폐사하거나 도축됐다. 이런 조치들은 효과가 있었지만, H5N1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적었고 그 규모가 작았던 덕이 크다. WHO의 기록에 따르면 H5N1에 감염된 사람은 861명이었고 그중 455명이 사망했다.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곳은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최초의 인플루엔자 팬데믹을 일으킨 것은 H5N1이 아니었다. 2009년에 H1N1(“돼지독감”) 균주에 기반을 둔 인플루엔자가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했다. 이것은 1918년 팬데믹을 일으킨 균주의 변종이었다. 그 발원지는 동남아시아의 재래식 신선 식품 시장이 아니라 북아메리카였다. 이 균주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이 바이러스는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것이 가능했다. 이 질병은 대규모 산업적 농축산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던 멕시코의 돼지 폐로 퍼졌다. 이 균주는 “인간과 조류, 북미와 유라시아에 사는 두 가지 돼지”에 감염되던 바이러스 계통의 유전자 조각이 결합된 것으로 밝혀졌다. WHO는 재빨리 돼지 인플루엔



남수단인들도 최근까지 콜레라로 고통받았다. 마살 물을 구하는 남수단 소년



중국 자본주의

중국 자본주의는 전염병이 퍼질 조건이 이미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홍콩의 열악한 주거 환경

자 팬데믹을 선언했다. 다행히도 바이러스는 비교적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고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사망률이 비슷했다.[한국에서는 ‘신종 플루’라고 불렀다 – 역재]

이 일로 WHO는 상당한 역풍을 맞았다. 특히 여러 WHO 소속 전문가들이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생산에서 이익을 보는 제약 기업에 고용돼 있다는 사실을 영국의 의학 잡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 폭로하면서 역풍은 거세졌다. 이는 공공 보건을 공공재가 아닌 사재로 취급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영리 추구에 물든 의료 기관이 의심을 받거나 적개심을 사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H5N1과 H1N1은 아슬아슬하게 피한 재앙으로 보는 것이 옳다. 더 정확히는 재앙이 그저 미뤄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H5N1가 인간에서 인간으로 쉽게 전파되지 못하고, H1N1가 병독성이 강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나타난 두 코로나바이러스는 재앙을 낳았다.

2003년 광둥성에서 한 코로나바이러스가 나타나 수많은 폐렴 환자를 낳았다. 이 바이러스에서 비롯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의 증례치명률은 약 10퍼센트였다. 사스는 광둥성의 재래식 신선 식품 시장에서 팔리던 흰코 사향고양이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동물들은 사스와 관련된 다양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인 중국 관박쥐와 인간을 잇는 가교 구실을 했을 것이다.

사스의 등장은 윌리스가 말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광둥성이 급격하게 성장한 결과 광대한 “도시-주변” 지역이 형성됐는데 이 지역은 “산업과 농촌, 도시 활동과 농촌 활동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중국 경제 개방 이후 더 가속화했다. “개혁 이전에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은 … 중앙 자원 배분, 가격 통제, 이동 통제로 엄격하게 제한됐다. 이는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장벽’을 세우는 효과를 냈다. … 개혁 이후 경제 자유화·유연화 정책이 시행되자 도시 인구나 농촌 인구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상호작용이 허용됐고, 이는 도

농 관계의 재편으로 이어졌다.”

이미 인구가 1000만에 이르던 광저우에 사스가 유입된 것은 2002년 말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 관료들은 2003년 2월 11일까지 사스 발병에 관한 정보를 자기 국민에게든 국제 보건 관련자에게든 알리지 않았다. 사스는 결국 정부가 대규모 격리, 검사, 방역 조치를 취한 끝에 2004년에 사그라들었다. 이는 여러 면에서 2020년 초에 벌어진 일의 예행 연습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사스만큼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사스는 이미 감염자가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시기에 전염력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그렇지 않았으며 이미 훨씬 널리 퍼졌다.

훨씬 더 치명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타났다. 메르스의 증례치명률은 3분의 1에 이르렀다. 메르스는 유럽, 아시아, 다른 중동 지역, 북아메리카로 퍼졌으며 2494명의 확진자와 858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메르스의 경우 박쥐와 인간을 연결해 준 것은 단봉낙타였다. 단봉낙타들은 수십 년 동안 메르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석유가 풍부하고 많은 곳이 도시화한 현대 아랍 국가들에서 낙타는 운반이나 즉각적 소비에 쓰이지 않고, 사회적 지위의 징표로서 소유되거나, 경주, 판매용 육류·유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쓰인다. 오늘날 낙타는 집약적으로 사육될 뿐만 아니라 많은 수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되고 있고(201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축된 낙타의

70퍼센트가 수입산이었다), 낙타 경주나 전시용으로 여러 아랍 국가들을 드나들고 있다. 이런 상업적 과정이 상이한 개체군에서 유래한 상이한 코로나바이러스 균주의 혼종을 낳고 메르스 발병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네가지 속(屬, 하위 그룹) 중 하나인 베타코로나바이러스속의 한 종류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우한은 인구가 1100만 명에 이르는 도시로, 중국 중동부 내륙 후베이성의 성도(省都)다. 우한은 광둥성의 북쪽에 있으며, 광둥성은 중국 동부의 장쑤성과 함께 중국 제조업 성장을 추동하는 엔진 구실을 했다. 우한은 20세기 초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요한 도시였다. 우한은 수로 교통의 중심에 있었고 나중에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가 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우한은 국가가 지원하는 대규모 중공업, 특히 철강 산업, 나중에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다.

1970년대 말 중국 경제가 개방되면서 우한은 해안 지방에 비해 중요성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근래에 우한은 중국 건설 경기 회복의 한복판에 있었다. “우한은 건축 자재와 토목 기사들을 과잉공급하여 거품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부동산 호황 도시가 되기도 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발표에 따르면 우한 거주자 수는 2008~2017년 동안 20퍼센트 증가했다. 신규 유입 인구의 다수는 중국의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이들은



페스트는 당시 무역 네트워크와 항로를 타고 확산됐다

산업 생산의 확장은 야생 식품 생산을 야생의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 팬데믹이 될 잠재력이 있는 훨씬 더 다양한 병원체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다.

도시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2017년 주택 개발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268억 달러에 이르렀고 부동산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네 배나 치솟았다. 우한의 최대 부자인 엔 즈는 2018년 최대 1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서 벌어들였다.

우한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재래식 신선 식품 시장에서 식량을 구하며 코로나19도 이를 배경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윌리스가 지적하듯 “공장식 축산과 재래식 신선 식품 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둘의 유사점을 (그리고 둘의 변증법적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신선 식품 시장과 이국적 식품들은 오늘날 중국에서 산업적 생산만큼이나 중요하며, 둘은 경제 자유화 이래로 병존해 왔다. … 사실 두 식품 유형은 토지 이용 면에서 통합될 수 있다. 산업 생산의 확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야생 식품 생산을 잔존하는 야생의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고, 팬데믹이 될 잠재력이 있는 훨씬 더 다양한 병원체들을 끄집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도시 주변부가 갈수록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인간 개체군과 새롭게 도시화한 농촌의 만남(그리고 상호 침투)이 늘어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야생 동물조차 [농업의 —조셉 추나래 가치 사슬에 얽혀 있다. 타조, 호저, 악어, 과일 박쥐, 사향고양이가 그런 예다.(사향고양이가 소화하지 못한 채 배설한 열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원두

로 공급된다.) 어떤 야생 종들은 심지어 그 정체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전에도 매대 위에 오른다. 다만 시장에서 팔리는 코가 짧은 새로운 상어가 그런 예다.

갈수록 모든 것이 식품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한 지역씩, 한 종씩 자연이 뜯겨나갈수록 남은 것들은 그만큼 귀중한 것이 된다.

실제로 중국의 정책은 전국 수준에서,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지방·지역 관리들을 통해 야생 축산을 조장했다. 야생 축산은 농촌 경제를 진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2017년 야생 축산의 가치는 52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우한 밖으로 퍼졌다. 세계 인구가 전례 없이 서로 연결돼 있었을 뿐 아니라 항공 교통 덕분에 이동 시간이 병원체의 잠복기보다 짧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은 채 타지에 도착해서 질병을 퍼뜨릴 수 있었다.

2003년 사스가 유행했을 때에는 홍콩이 세계 다른 주요 도시로 전파되는 중심지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국 자체가 다른 도시들과 촘촘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다. 우한에도 국제공항이 있고 이 공항은 해외 60여 개 도시들을 우한과 연결한다. 2019년 중국에서는 5억 1500만 건의 국내 항공 운항이 있었고, 국제 항공 운항은 2002년 620만 건에서 2016년 5162만 건으로 늘어났다.

중국에서 눈부신 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 의료 지출은 여전히 미미했다. “공공지출 대부분은 다리, 도로, 값싼 전력 생산 같은 고전적인 기반 시설에” 쓰였으며 이는 “기초적인 공공 보건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다른 나라들의 산업화 초기 생활 환경이 일부 재현되는 결과를 낳았다. 보건의료를 위한 1인당 공공지출은 “중상위 소득’ 국가들보다도 낮았으며 … 브라질, 벨라루스, 불가리아의 절반 수준이었다.” 게다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건너온 수많은 농민공들은 고향을 떠난 탓에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 중국 전역과 세계 전체로 전염병이 퍼질 조건이 무르익었던 것이다.

번역 이원웅

기획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

김준효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버니 샌더스의 두 차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도전이 직접적 계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미국 공식 정치에까지 등장한 것에 놀랐다.

샌더스와 민주적 사회주의의 짧은 역사

“민주적 사회주의”는 버니 샌더스의 창안이 아니다. 1970년대 유럽에서 유러코뮤니즘 좌파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사회주의 전략을 폐기하며 내놓은 것이 최초로서, 개혁주의적 정당이 집권해 국가를 민주화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는 것이 그 요체다.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도 이와 대략 비슷하다. 선거로 집권해 국가 주도 친서민 개혁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샌더스가 주목받은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와 크게 연관이 있다. 당시 미국 국가가 다수 대중은 외면하고 대자본만 구제해,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깊어졌다.

2011년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의 구호 “우리는 99퍼센트다”는 그런 정서를 집약한 것이었다. “99퍼센트보다 1퍼센트를 더 우대하는 체제가 어떻게 민주적일 수 있겠는가!”(아랍 혁명이 이 운동에 커다란 영감을 줬다.)

당시 샌더스는 대규모 부자 감세에 항의해 8시간 넘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장시간 연설로 의사진행 방해하기) 행위를 해 이목을 끌었다. 그 후, 2015년 말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출마했다. 샌더스는 민주당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풀뿌리 민주주의”(“사회운동”)를 이용해 득표하겠다는 전술로 1300만 표 넘게 얻었다.

하지만 샌더스에게 '민주적' 요소는 민주당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정돼 있었다. 민주당에서 독립한 운동을 건설한다는 전략은 없거나 부차적이었다. 샌더스가 호소한 핵심(이자 거의 유일한) 실천은 민주당 예비경선 참가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가 샌더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샌더스 선거 도전 후 무엇이 진정한 '민주적 사회주의'인가를 두고 백가쟁명식 논쟁이 불거졌다.

미국 민주사회당 DSA는 그 중요한 주체 중 하나다. DSA 창립자들은 1970년대 말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최초로 주장했다.

레이건

1980년에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은 훗날 신자유주의라고 알려진 일련의 공격을 강행했다.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복지 정책들은 심각하게 개혁되거나 일부는 아예 사라졌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었고, 임금이 대폭 삭감됐지만 노

샌더스 선거운동은 미국의 좌파들한테 기회로 여겨졌다(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일부는 성과를 얻기도 했는데, 특히 미국 민주사회당(DSA)은 당원이 10배 가까이 늘어 대규모 단체로 성장했다.

그런데 민주적 사회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전략을 지향하는가?

동시장은 늘었다. 착취율이 치솟았다.

그 과정에서 미국 노동운동은 더욱 심각한 패배를 겪었다. 미국 노총 AFL-CIO는 레이건 정부와 잇달아 타협해 미국 노동계급 대다수를 배신했다.

DSA는 이때 창당됐다. 핵심 주창자 마이클 해링턴은 “제1당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곳”인 민주당 안에서 친노동자적 경향을 강화해 민주당을 “공화주의적 사회주의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930년대 이래로 미국 좌파에서 계속됐던 민주당 의존의 새로운 버전이었다.(이에 관해서는 이번 호 10면 기사와, 315호에 실린 ‘미국 민주당은 어떻게 진보 염원을 좌절시켜 왔는가’를 보시오.) 해링턴은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 안에 이미 대중적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레이건 재선 저지 압력으로 DSA 창당의 동력이 됐다. DSA는 민주당의 지배적 영향을 받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무해 레이건에 맞선 “대중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강경 냉전주의자 월터 먼데일을 지지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당의 신자유주의 전폭 수용(과 레이건의 재선)을 전혀 저지하지 못했다.

이후 사반세기 동안 DSA의 전략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DSA는 민주당 안팎에서 영향력이 매우 작았고, 민주당 지역 조직의 작은 일부로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샌더스식 '민주적 사회주의'가 기대 이상의 돌풍을 일으킨 덕에 DSA는 세를 크게 키울 수 있었다. 그 돌풍에 기대를 품고 민주당 밖에 있던 좌파의 일부도 DSA에 입당했다. 비교적 지향이 단일했던 DSA는 2016년을 거치며 여러 경향이 동거하는 정치 단체로 변모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민주적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쟁이 점화됐다. 민주당을 탈당해 진보 정당을 만든다는, DSA 창당 당시 거부됐던 전략이 DSA 안팎에서 공공연히 거론됐다. 이 탈당 논쟁은 샌더스가 2020년 예비경선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또다시 권력층 후보(조 바이든)를 지지하면서 재점화됐다.

한편, ‘한 지붕 여러 가족’ 모양으로 바뀌면서 DSA 활동의 양상도 조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대개 민주당 지역위 내에 머물렀지만, 이제 DSA 일부는 노동자 투쟁과 다른 사회운동에도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취임 규탄 시위에 참가한 미국 민주사회당 당원들

선거로 “정치 권력 장악”?

그럼에도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의 핵심 인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공유한다. 바로 기존 국가를 선거로 장악해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를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해링턴은 이를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정식화했다: 자본가들은 권력을 오용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력 발전이 만들어 낸 진보의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 권력을 장악”해 자본가 계급의 전횡을 억지해야 한다. 그러나 소련식 ‘사회주의’는 권위주의 독재로 귀결됐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방식”(선거)으로 현존하는(따라서 현실적인) 국가 권력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노동자 정당으로 집권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부에 친노동자적 경향이 존재하는 민주당을 활용해야 한다.

DSA에 영향력이 있는 미국 좌파 개혁주의 언론 《자코뱅》의 편집자 바스가 순카라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샌더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노동자 투쟁을 창출하는 … 계급투쟁적 사회민주주의”의 상을 제시했다. 이를 이어가려면 DSA가 민주당 안팎에서 장차 민주당을 넘어설 운동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샌더스 선거운동 같은 민주당 내 도전으로도 사람들을 끌어들이어야 한다.

노동계급의 구실이 결정적이다

그럼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지지자들은 국가에 소망적 기대를 갖는다. 그 배경에는 “사회 체제를 아래로부터 바꾸는 … 동질적이고 단일한 노동계급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해링턴)는 생각이 깔려 있다.

노동계급이 체제를 바꿀 수 없다(기껏 바뀐다 소련식 권위주의 독재가 올 뿐이다)는 전제는 오늘날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대개 공유하는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좌파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존하는 권력을 이용해 “자유와 정의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라도 현실화”(바스카 순카라)시키고, 현 체제를 “민

《자코뱅》의 객원 편집자 크리스 메이샤노는 이런 진술을 더 분명히 했다. “정부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이용해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깨는 것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하는 필수 조건이다.”(강조는 인용자의 것)

물론 자본주의 국가는 특정 상황에서 개별 자본의 이해관계를 거스르기도 한다. 히틀러의 나치 국가가 티센 등 일부 대기업을 몰수해 헤르만 괴링 공장을 세운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니와, 자본주의적 착취와 자본 축적이 이뤄지는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런 국가도 일정 정도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자본가들도 복지가 노동계급 재생산 과정을 촉진해 착취와 효율을 높이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황기에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노동계급 몫을 한사코 줄이려 한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들과 체제 수호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국가는 다른 국가나 노동계급으로부터 자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국익)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돼 있고, 자본들이 잉여가치를 획득할 제반 조건들(법치)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 그 대가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계급에게서 착취한 잉여가치 일부를 세금으로 받는다.

중과 그들의 공동체가 주도하는 … 자유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런 전략에서 노동계급의 구실은 “자본으로부터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 [내고] … 정부가 하는 일에 대규모의 대중적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제한된다.

반면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스스로 해방되는 과정이 사회주의의 요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르크스가 1864년에 작성한 국제노동자협회(제1인터내셔널) 규약은 이렇게 시작한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위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현존 국가 자체가 사회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국가 내 상이한 기구를 구분한다. 예컨대 군대·경찰·법원 같은 기구는 독재적이고, 소방서·도서관 같은 기구는 ‘사회주의적’이라는 식이다. 그들은 후자를 강화해, “대중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 현행 판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기구가 “대중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가 국가기구에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구도 사기업처럼 철저한 상명하달식으로 운용되고,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부리듯 선출되지 않는 관료들이 하급 공무원들을 부린다. 이는 개별 기구의 업무 내용을 불문하고 마찬가지로. 도서관 사서도 법원 서기만큼이나 자신의 노동과정과 인적·물적 자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독립전쟁에서 남북전쟁에 이르는 미국 부르주아 혁명 과정에서 형성된 미국 국가기구는 두드러지게 비민주적이다. 몇 년에 몇 분씩 주어지는 투표조차 ‘평등’(1인 1표)하지 않다. 극심한 인종차별이 그들의 주요 무기 중 하나다. 양대 자본가 정당 소속이 아니면 공직 진출 시도조차 쉽지 않고, 사소한 친노동적 변화 시도조차 각종 타협과 공격에 밀려 제약된다.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그런 해방에 동반하는 노동계급의 국가 창출, 즉 노동자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으로 기존 국가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도 이것이다. 현 정치 체제 하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계급만이 “혁명 속에서 오래된 오물을 털어 내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적합해질”(마르크스) 유일한 사회계급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노동운동 계급 협력 노선의 우울한 결말

이정구

문재인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자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진정한’ 뉴딜이 아니라거나, 경제 성장 그 자체만을 목표로 삼는 뉴딜이 아니라 그린뉴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1930년대 미국에서 실행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 일변도가 돼서는 안 되고 사회적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펼쳤을 때 당시 미국의 노동운동과 좌파가 취한 입장과 실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9년 대불황은 기업들에게 타격을 줬지만 노동자 대중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들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실업이었다.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한 1933년에 미국의 실업자는 1500만 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나 됐다.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는 1929년에 12만 8000명을 고용했지만 1931년에는 3만 7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경제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퇴역 군인들이 나섰다. 1932년 보너스(보상) 지급이 중단되자 퇴역 군인들은 워싱턴까지 행진한 뒤 노숙 투쟁을 벌였다. 맥아더 장군은 시위대들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라며, 후버 대통령의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우익인 맥아더가 우려할 만도 했던 것이 1929년 대불황 이후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州)에서는 많은 방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는데, 공산당원들이 주도했다. 또 실직한 광원들이 팀을 조직해 회사 소유의 광산에서 석탄을 캐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국가 고위 관료나 자본가들이 볼 때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기겁할 만한 운동이었다. 대불황으로 토지를 빼앗긴 오클라호마주(州)의 소농과 소작인들은 경제 위기로 팔지도 못하고 결국 버려질 대농장의 오렌지를 왜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느냐고 반발했다.

1931년 7월에는 디트로이트시(市)의 시립수용소에서 퇴거당한 실업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8월 인디애나 항구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던 실업자 1500명이 과일수출회사의 공장을 습격했다. 1933년 1월 뉴욕에서는 실업자 수백 명이 한 음식점을 에워싸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다.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했던 1933년은 미국 자본주의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때였다. 그가 추진했던 뉴딜 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실업자들의 저항 그리고 소작농들의 반란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사진 출처: 미 의회 도서관

대불황 이후 터져나온 투쟁들 1934년 가을, 방직 노동자 321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 파업 중이던 방직 노동자들이 9월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며 행진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회복

뉴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전국산업부흥법(NIRA)은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물가와 임금을 동결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정책은 경영주, 노동자, 정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처음부터 대기업이 좌우했고, 따라서 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했다.

루스벨트는 노동자 조직이 강한 영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모종의 양보를 했지만 노동자 조직이 허약한 곳에서는 기업들이 주도하도록 내버려뒀다. 한 역사가는 “몇몇 대기업들이 전국산업부흥법의 특정 조항 때문에 난감해했지만 전국산업부흥법은 이들 대기업들의 권력을 재확인하고 공고히 해 줬다”고 평가했다.

농산물의 폭락을 막고 농민들을 지원하는 농업조정법(AAA)도 소작인이거나 소농이 아니라 대농들에게 유리했다. 사회 하층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된 정책은 테네시 계곡 개발 계획이었다. 정부는 홍수를 조절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테네시 계곡에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했다.

테네시 계곡 개발계획이 ‘사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이 있었어도 전체적으로 뉴딜의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 경제 회복이 주된 목표였다. 그와 동시에, 하층민들의 반발이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이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려는 목표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뉴딜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기보다는 투쟁을 벌였다. 자발적

인 투쟁들이 폭발했다. 1934년 초 노동자 150만 명이 파업을 했다. 부두 노동자들과 트럭 운전자들도 가세했다. 1934년 여름에는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의 팀스터(트럭 운전기사)들이 파업을 벌였고, 그해 가을에는 방직 노동자 321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1934년에 와그너-코너리 법안(와그너법)이 마련됐다. 와그너법은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쉽게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 점이 뉴딜 정책의 긍정적인 요소로 흔히 거론되곤 한다.

그러나 와그너법은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제공한 하사품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동쟁의에 직면해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그래서 철강회사가 워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 법이 합헌적이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유용한 법이었는데,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유리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벌이는 비공인 파업을 단속하는 데도 쓸모가 있었다.

급진화

당시 여러 부문에서 노동조합들이 새롭게 결성됐다. 현장 조합원들의 파업과 폭동이 노동조합의 신규 조직화를 촉진하고 노동조합 지도부를 행동하도록 압박했다. 이 당시 노동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점거파업은 1930년 초반 오하이오주(州) 애크런의 타이어 노동자들이 처음 사용했다. 이 투쟁 방식은 생산을 중단시키고 기업주들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산업

별노동조합회의(CIO)가 노동조합 조직을 건설하는 데 미국공산당의 구실이 컸다. 물론 1934년 트럭 노동자들의 파업 때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지만 공산당보다 규모가 매우 작았다.

공산당은 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 공산당은 CIO에서 신규 노조 조직을 주도한 수많은 현장 지도자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공산당은 자동차 부문에서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36년 애크런 타이어 노동자들의 파업과 GM 플린트공장 점거파업을 이끌 수 있었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반혁명을 통해 1917년 혁명이 이룩한 성과들을 파괴하고 있었지만 소련 밖에서는 공산당들이 러시아 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했고, 또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공산당과 스탈린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었다.

공산당의 구실

1935년 스탈린이 통제하던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이 인민전선 전략을 내놓았는데, 핵심 내용은 공산당이 자본주의 개혁파들과 협력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직전까지 공산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사회 파시스트’라고 비난하며 그 당과의 공동전선을 거부하다 180도 입장을 바꿔 이제는 자본주의 정당들과 협력하는 계급 연합 노선을 채택한 것이다. 파시즘에 맞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런 정책 전환에 따라 미국공산당은 루스벨트와 민주당에게 협력을 다짐했다.

1936년 대선이 다가오자 공산당은 루스벨트를 지지했고, 공산당의 현장 간부들에게는 CIO 지도부를 도와 루

스벨트에게 노동계급 표를 몰아주라는 지침이 하달됐다. 노동자들이 파업운동을 거치며 대규모로 급진화하려던 바로 그때 공산당은 도리어 투쟁적인 노동자들을 단속하려 애썼다. 민주당과 단절할 준비가 돼 있던 많은 투쟁적 노동자들이 결국 좌절을 겪었고, 그때 이래 오랜 시간 동안 노동운동은 민주당에 절반쯤 종속된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의 해악적 구실은 플린트 점거파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CIO의 지도자 존 L. 루이스는 파업이 승리로 끝나자마자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하려 들었는데, 공산당의 협조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공산당 기관지 〈데일리 워커〉는 “공산당과 공산당원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떤 형태의 비공인 파업도 옹호한 적이 결코 없다”고 썼다.

공산당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이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은 혁명을 포기했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진시키기는커녕 저버렸다. 그 결과 공산당은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조직에서 반쯤은 중간계급적 조직으로 변형됐다. 즉, 공산당은 현장 조합원들이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변모했다.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군비 확장으로 호황이 찾아오자, 루스벨트는 CIO 내 급진세력들의 도움이 필요없어졌다. 공산당은 토사구팽의 처지가 됐다. 그런데도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공산당은 루스벨트와 CIO 지도부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로 돌아섰다. 전후 J. R. 매카시 상원의원이 반공주의 마녀사냥을 벌이자 공산당은 민주당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의 대가를 토틈히 치렀다.

이처럼 1930년대의 미국 경험은 부르주아 정당을 지지한 것이 노동운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노동계급의 독립성을 훼손해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한국에서 민주당과의 ‘뉴딜 동맹’을 추구하자는 주장이 위험한 까닭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경제 위기
- ★ 정세성 정치: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 ★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방어하다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대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대처에 고군분투하고 있던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추경 예산이 대부분 기업 지원에 맞춰졌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우선순위는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 성장”에 맞춰졌다. ‘4대 투자중점’에서 일자리와 복지는 3순위로 밀렸고 감염병 대응은 산재 대책과 함께 네 번째에 놓였다.

투자가 기업 지원에 맞춰진 반면 공공기관들에는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재량 지출 10퍼센트 의무 감축, 관행적 보조금·출연금 전면 정비, 집행실적·성과 부진 사업의 과감한 예산 감축 등 추진.” 기업 지원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니 공공기관의 예산을 줄이라는 것인데 이 공공기관에는 공공병원이나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 기관도 포함된다.

이런 지침에 발맞춰 대표적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도 예산 절감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수가 줄었다며 올해 예산을 900억원 가까이 줄이겠다고 나섰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대폭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시간이 줄 것 같지는 않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연장근로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방역 물품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던 서울대병원 예산을 더 줄이려는 정부 3월 6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 지 일 년 남짓 지났을 뿐이다. 2018년 초 특별근로감독 결과 서울대병원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줄인다고 그만큼 휴가가 보장되는 것 같지도 않다. 코레일 사측이 쓴 꼼수처럼 연차를 이월시키는 방식으로 돈만 떼먹으려 할 수 있다.

재료비 절감은 당장 노동조건 악화와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저질 재료와 적은 여유분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심지어 전기수도료, 건물유지보수비, 교

육훈련비 등도 많게는 40퍼센트 이상 줄인다는데 이는 가뜩이나 노후한 병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후퇴와 임금 감소

서울대병원 측은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고정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재료비도 줄이겠다고 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병원 노동자들과 환자들이 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착한 적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예산 절감을 밀어붙이고 공공병원 사측은 이에 발맞춰 공공서비스와 임금을 줄이려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는 실속이 크게 떨어진다. 이 위기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나 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비롯한 인력 총원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심지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여영부영 시간을 허비하며 실질적 대처를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원격의료,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최근 수술재료 포장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했다.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과 환자들을 희생시키려 한다.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장호중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4년 만이다.

최근에 폭로된 국정원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전교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작을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팩스한 장’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만큼 얼마든지 직권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공약해 놓고는 지방선거, 법률적 판단, ILO 협약 비준, 법 개정 등등 핑계를 대며 나 몰라라 하는 식

으로 일관해 왔다. 이 때문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기간은 지난 정부 시절보다 현 정부 들어 더 길어진 상태다. 지난 5월 11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지만,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정부와 여당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사법농단의 결과물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3년 10개월 동안 질질 끌다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그러고도 5개월이 지나야 공개변론을 여는 것이다.

대법원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사법농단의 대표적 피해 사례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해

야 한다.

한편, 전교조 집행부는 5월 20일 공개변론 대응으로 조합원들의 자필 탄원서를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당일 오전 중집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원래 5월 16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 대며 거리에서의 집단적 저항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옥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를 통제하는 것은 감염 공포를 이용해 저항을 억누르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 집행부가 법외노조 취소와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을 두고 정부에 맞서 저항하기보다 정부와의 협의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전교조 집행부는 코로나19 대응

책임을 개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정부를 규탄하기보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단체 공동선언’ 참여, 교육부와 의 간담회 등으로 정부와 협력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교육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문제, 코로나19 대응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갖 교육 개혁 공약도 내팽개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나선 이유도 봐야 한다.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확대에 맞선 저항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작권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다.

법외노조 취소, 코로나19 대응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의 책임 회피에 맞서고 투쟁해야만 교사들의 불만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미연 전교조 전국 대의원

무급휴직이나 해고나 ...

나쁜 선택만 강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

끝내 정리해고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의 비정규직 8명이 정리해고 됐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청소와 수화물 분류 작업을 맡고 있는 하청업체다. 아시아나항공-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아시아나케이오로 이어진 다단계 하청 구조이다.

지난 3월 말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위축을 이유로 비정규직에게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했다.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하겠다고 압박했다.

사측의 강요 속에서 120여 명이 ‘희망퇴직’했고, 200여 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급휴직 중이다. 끝까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비정규직 8명은 결국 정리해고 된 것이다.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은 해고와 다를 바 없다.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약속 파기

애초 사측은 3월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 휴직수당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말 약속을 뒤집고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강요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사측이 내야 할 휴직수당의 10퍼센트조차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지부 김정남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용자가 해고를 밀어붙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고, 노동자들은 생계비가 0원이 되는 무기한 무급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측은 두 달이 넘게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하지 않고 무기한 무급휴직만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제기한 임금 체불 소송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짓말까지 유포했다.

문재인 정부가 항공산업에 3조 3000억원의 기업지원대책을 내놓으며 ‘고용유지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말뿐이다.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자신이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노동자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만 했다.

5월 11일 정리해고 하루 전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기업 경제 활성화”만을 강조했다. 생계난과 해고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바람과 요구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사용자들에게는 수조 원을 지원하면서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등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로 내몰리는 마당에 말이다.

아시아나케이오는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유병규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장호중 의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예고된 사건이었다.’ 어디서 많이 들던 얘기 아닌가. 두 달 전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너 나 할 것 없이 하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에도 지겹게 들어 온 얘기다.

친민주당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만 강조하며 ‘생활 방역’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언론들도 다른 나라 정부들의 방역 완화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누가 봐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친민주당 언론들의 확진자 개인 탓하기와 노골적인 정부 편들기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돌연변이로 생겨난 신종 바이러스다. 이는 인류 전체가 면역력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감염을 막으려면 물리적 거리두기 외에 방법이 없다.

둘째,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한 번 번지면 따라잡기 어렵고 순식간에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 우한, 대구, 뉴욕, 런던에서는 기존의 병원과 기반시설들이 갑자기 늘어난 환자 수를 감당하지 못해 손 한 번 못 쓰고 죽어간 환자들이 많다.

셋째, 예상보다 치명률이 높다. 아직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지만 고령층에 매우 치명적이고(한국의 경우 80대의 치명률은 20퍼센트가 넘는다),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확산하면서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있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무증상 감염’은 다른 감염병과 가장 다른 특징이자 가장 위험한 특징이기도 하다.

다른 감염병의 경우 증상 발현이 감염자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아프니까), 전염력이 생길 때쯤 증상이 발현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 신호로 작용한다. 감기에 걸려 훌쩍대는 가족이나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열이 나는 아이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의 경우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20~30퍼센트가량 되고, 전염력이 생기고 나서 한참 뒤에야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감염자가 매우 활동적이면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외출제한령, 이동제한령, 심지어 완전봉쇄까지 극단적 처방이 내려졌다.

따라서 방역 완화는 거의 필연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독일에 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사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것도 아닌 듯하다. 최초 확진자로 지목된 사람과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3월 20일 퇴근 시간 신도림역 풍경. 허물며 ‘생활 방역’ 하에서는 집단 감염이나 재확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날 증상이 생긴 사람, 즉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태원의 다른 클럽에 다녀간 경우가 최소 두 건 발견됐다. 이태원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무증상 감염

“서울시와 경기도는 역학 조사 기간을 4월 24일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 스스로 감염이 시작된 시점을 4월 말~5월 초 연휴 이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퍼지고 있던 감염이 연휴 기간에 크게 확산했다는 뜻이죠.”(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2019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견된 이래로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다. ‘최초’ 확진자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66번이든 31번이든 분명히 누군가에게서 감염된 것이고 이는 여기저기서 여전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산세가 느려지다가 일부 지역 내에서는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해 없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확산돼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동하면 다시 감염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혹여라도 등교를 강행한다면 싱가포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싱가포르는 3월 말 확진자가 줄자 등교 개학을 강행했는데, 그 결과 재확산이 시작돼 며칠 만에 다시 학교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매일 수백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태원에서 발견된 집단 감염이 얼마나 확산될지는 알기 어렵다. 5월 13일 현재 이태원 관련 확진자는 120명으로 서울(70명)을 비롯해 전국으로 이동해 2~3차 감염이 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실제로는 4~5차 감염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처럼 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과 기성 언론들은 클럽에 간 청년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와 똑같은 반응이다.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완화한 당사자들이 청년과 성소수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마치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재개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그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2미터씩 간격을 두고 접촉하지 않은 채 대화도 없이 술만 먹고 나갈 것을 기대한 것일까? 아니면 열이 फै팔 나서 증상이 확인한 사람이 코로나 따위 알 바 없다며 클럽을 드나들었다고 여기는 것일까? 무엇보다, 4월 19일에 종료된 영업정지 명령을 연장하지 않고 영업 재개를 허용한 것은 박 시장 자신이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집단 감염을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한다.

“총선 직후에 정부 자신이 클럽 등 유흥주점을 다 열어 주고는 이제 와서 늘었다고 비난하는 건 황당한 일이에요. 그럼 클럽에서 뭘 하라고 열어 준

겁니까?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는 클럽과 노래방을 마지막까지 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경제적인 동기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죠.

“정부가 ‘숨은 확진자’나 ‘조용한 전파자’니 하며 피해자들을 비난하는데, 진정한 ‘숨은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라고 봐야 해요.”

문재인은 5월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도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경제 활성화’를 집중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역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적반하장

따라서 구로 콜센터, 요양병원들, 이태원 클럽에 이은 집단 감염은 반복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확산 대비는 커녕 확률 낮은 도박에 미래를 내맡기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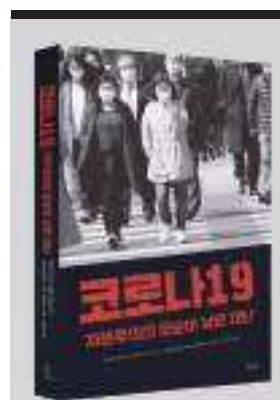
정부는 그때마다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확진자 중 일부를 마녀사냥해 책임을 떠넘기려 할 것이다. 지금도 성소수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학원 강사 등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며 사람들의 주의를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호한 지침만 내려놓은 이유는 이런 책임 전가를 위해서일 것이다.

개인정보 공개와 권위주의적 통제가 오히려 방역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세균 총리는 “이태원 방문 외엔 아무것도 안 묻겠다”며 빨리 검사

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뒤져 이태원 방문자들을 찾아내고, 휴대전화 사용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기록 조회 등에 이어 이제 CCTV까지 조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영터리 ‘생활 방역’을 중단하고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등교 개학 방침을 취소하고 온라인 교육 개선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선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하고, 아프면 쉬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강제해야 한다. 경제 때문에(즉, 기업 이윤 때문에) 정부는 정말로 재난적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그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강조하지 말고 그저 비판과 독자적 행동만을 강조해야 한다.

신간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이클 로버츠, 우석균, 장호중 외 지음
장호중 역음, 책갈피, 208쪽, 12,000원